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0. 9. / (총 11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박 은 정	담당자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담당자 박 현 수		044-202-1714	
보건정책과	과 장 김 정 일	담당자 유 효 연		044-200-2293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안 광 찬	담당자 이 은 실		044-200-2295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윤 덕 희	담당자 최 문 갑		02-2113-7660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김 병 우	담당자 김 진 형		02-2133-7669	
경찰청 정보3과	과 장 김 진 형	담당자		032-440-7801	
				032-440-7849	
				031-8008-5420	
				031-8008-5422	
				02-3150-2083	
				02-3150-238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종교시설 등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도움이 손길이 미치지 못한 시설이나 영업장을 파악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최근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각종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신속히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를 신설했으나, 새로운 제재가 생겼다고 오해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방역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실효적 수단을 보완한 것으로서, 계도기간(10.13~11.12) 동안 일선 현장과 국민들께서 법 개정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최근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서,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환자와 고령자가 많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 병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은 의료인력 감염으로 이어져 코로나19 대응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에게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형 민생경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시유재산에 입점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 경비·청소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 기한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 무방문·약식심사를 통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콜라텍·유흥주점 제외)에 대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최저 0.03%의 금리로 지원한다.

- 서울시는 지원절차 간소화, 선지원·후점검 등을 통해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는 노숙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 400여 명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집단감염에 대비할 예정이다.

- 한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생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인천e음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 지난달 말 충전이 완료된 5만 원의 소비쿠폰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5만 원은 급식꾸러기몰*에서 현물로 구매할 수 있다.

* 인천지역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입점해 2개까지 상품을 등록(10월 15일 개설 예정)

○ 경기도는 10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한편, 한글날 서울집회와 관련하여 도·시·군(전세버스조합)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전세버스의 운행자제를 요청하는 등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인천광역시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① 추석 연휴 주말(10월 3일~10월 4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1.3%(3,800천 건) 감소하였다.

- 직전 주말(9월 26일~9월 27일)과 비교하면 11.2%(3,740천 건) 감소하였다.

* (8.15.~8.16.) 33,484천 건 → (9.26.~9.27.) 33,424천 건 → (10.3.~10.4.) 29,684천 건

○ 한편, 주말(10월 3일~10월 4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0.6%(16,517천 건) 감소*하였다.

* (8.15.~16.) 80,067천 건 → (9.26.~9.27.) 66,539천 건 → (10.3.~10.4.) 63,550천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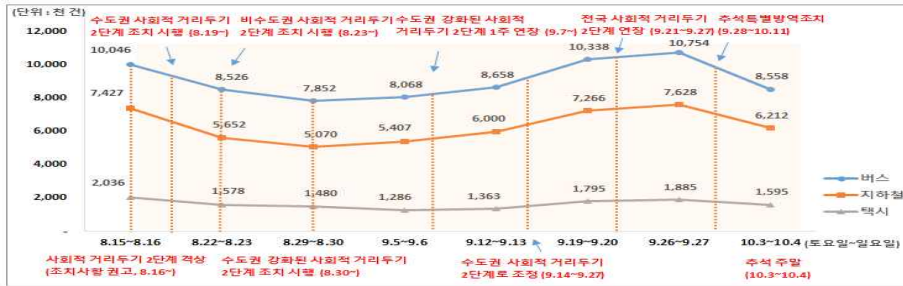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②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6.1%(3,144천 건) 감소하였다.

- 직전 주말(9월 26일~9월 27일)과 비교하면 19.3%(3,902천 건) 감소하였다.
- * (8.15.~8.16.) 19,509천 건→(9.26.~9.27.) 20,267천 건→(10.3.~10.4.) 16,365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③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7.1%(1,986억 원) 감소하였다.

- 직전 주말(9월 26일~9월 27일)과 비교하면 26.4%(3,469억 원) 감소하였다.
- * (8.15.~8.16.) 1조1648억 원 → (9.26.~9.27.) 1조3131억 원 → (10.3.~10.4.) 9,662억 원

○ 한편, 주말(10월 3일~10월 4일)동안의 전국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21.7%(4,549억 원) 감소*하였다.

- * (8.15.~16.) 2조945억 원 → (9.26.~9.27.) 2조2072억 원 → (10.3.~10.4.) 1조6396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많은 국민이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협조하여 주실 것과 연휴 이후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받기를 당부하였다.

3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로부터 '한글날 집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9일 (금)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220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9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 서울시와 경찰청은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집회 사전조치로 서울시는 대중교통(지하철)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하고 있다.

- 경찰청도 주요 단체에 대해 집회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등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였다.

- 한편, 경남, 충북, 충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회와 관련한 전세버스 운송 자제를 요청하거나, 상경 버스의 예상 출발지를 당일 현장 확인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집회로 인한 지역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 집회 개최 당일에는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도 실시한다.
- 경찰청은 광화문광장 주변 등 주요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선점 배치하는 등 다수의 집결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시위(2건)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 집회 이후 모든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집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42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7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67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6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정원 2,762명)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8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596개소, ▲음식점·카페 6,603개소 등 29개 분야 총 1만5912개소를 점검하였고, 출입자명부 작성 등 1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3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3개반, 568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진,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료와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결핵)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정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